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5:00~18:30
장 소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최 제주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관 제주연구원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5:00~18:30
장 소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최 제주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관 제주연구원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00~15:10	개 회 식	내빈 소개, 국민의례 등(사회자)
		개회사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축 사 :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기념촬영
15:10~16:40	발 표	**제1주제 -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 지방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주제 -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40~17:00	휴 식	
17:00~18:30	종합토론	좌장 : **고승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토론 : **고수희**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윤진** (국무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30	폐 회	

개 회 사



제주연구원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분야별 10대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과 정책 공감, 나아가 행복한 제주를 위한 핵심전략과 정책을 도출하여 도정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네 번째 정책토론회는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복지정책 방향을 공동 모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별 · 장애 · 연령 · 지역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계획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중요한 국정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과실을 누리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는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보편적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실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이동편의를 증진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등 복지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고도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민선7기 제주도정에서도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어르신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제주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복지가 커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연구원을 비롯한 제주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형 복지를 위한 정책연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해 주시는 양난주, 남찬섭, 고관용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훌륭한 역할을 맡아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신 가운데 우리지역의 복지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어나갈 토론회가 펼쳐지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는 김동전 제주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도 한편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절대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지만 정해진 법령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사업 개발, 연계협력 방안,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등 사회전반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환경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더욱 구체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복지정책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자리해주신 복지전문가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주지역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 태 순**

목 차

◈ 개회사 **김 동 전** 제주연구원장 ····· 2

◈ 축 사 **고 태 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 4

◈ 주제발표

•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 9

/ **양 난 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방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 31

/ **남 찬 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 47

/ **고 관 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문 ····· 61

주제발표 1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양 난 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양 난 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발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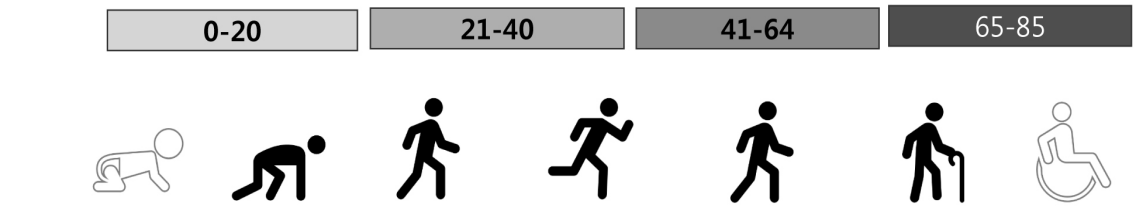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사회서비스
2. 지역 사회서비스보장의 특징과 문제점
3.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 1 : 커뮤니티케어
4.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 2 : 사회서비스원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내외 사례

2

1.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사회서비스

3

생애주기와 사회보장



과업	발달	노동	노후
사회서비스	소득보장 / 의료 / 사회참여·여가		
	보육/교육	실업/직업훈련	요양

4

▪ 사회보장기본법

▪ 제3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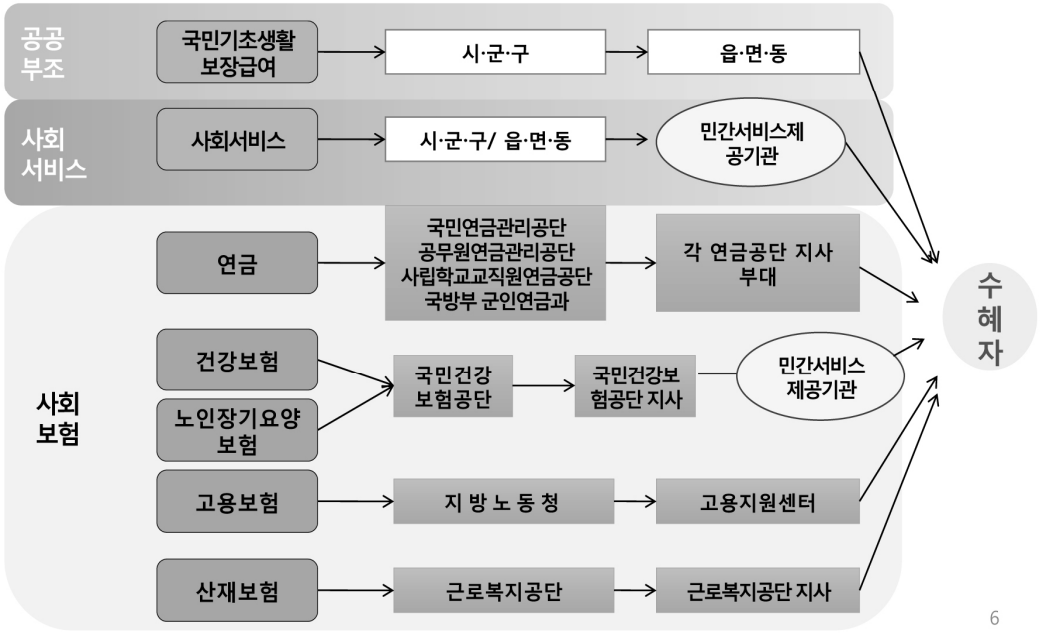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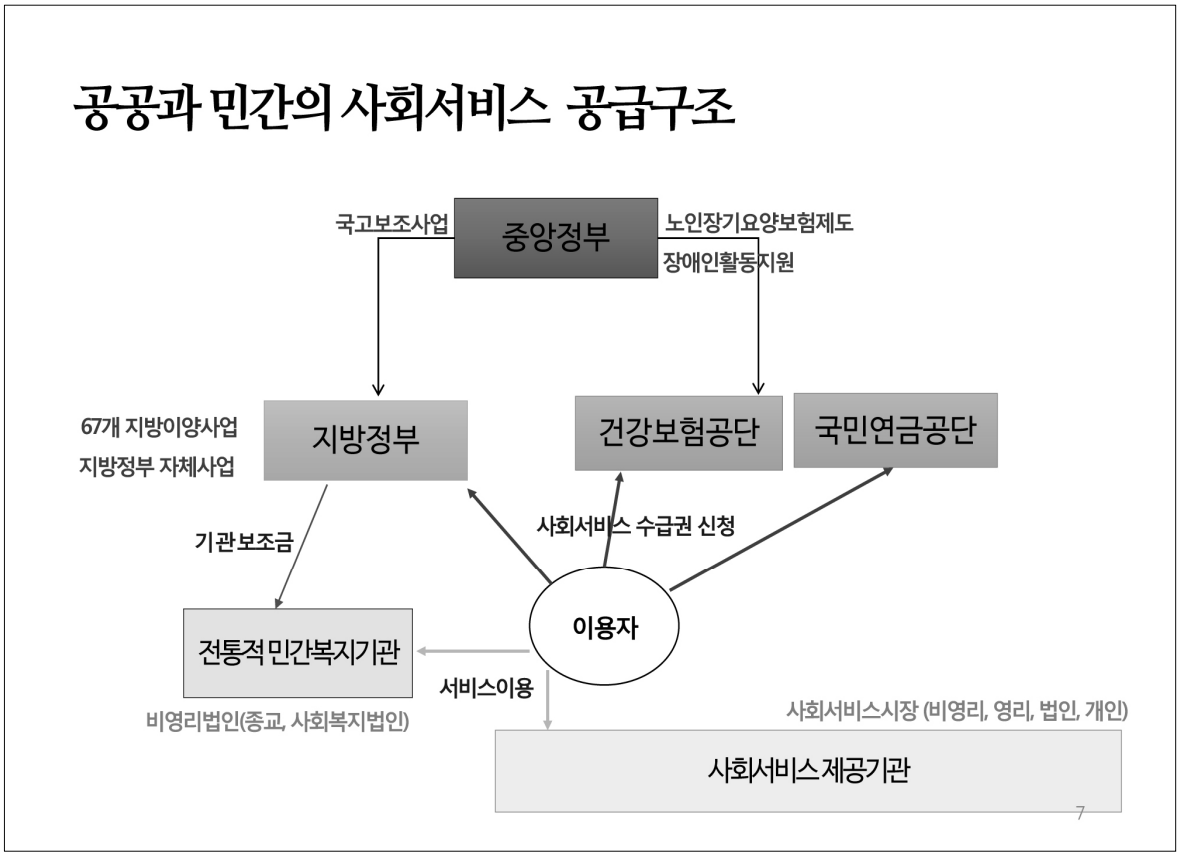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국고보조사업
중앙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
67개 지방이양사업
지방정부 자체사업
지방정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관보조금
사회서비스 수급권 신청
이용자
전통적 민간복지기관
서비스이용
비영리법인(종교,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시장 (비영리, 영리, 법인, 개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7

2. 지역사회서비스 보장의 특징과 문제

8

지역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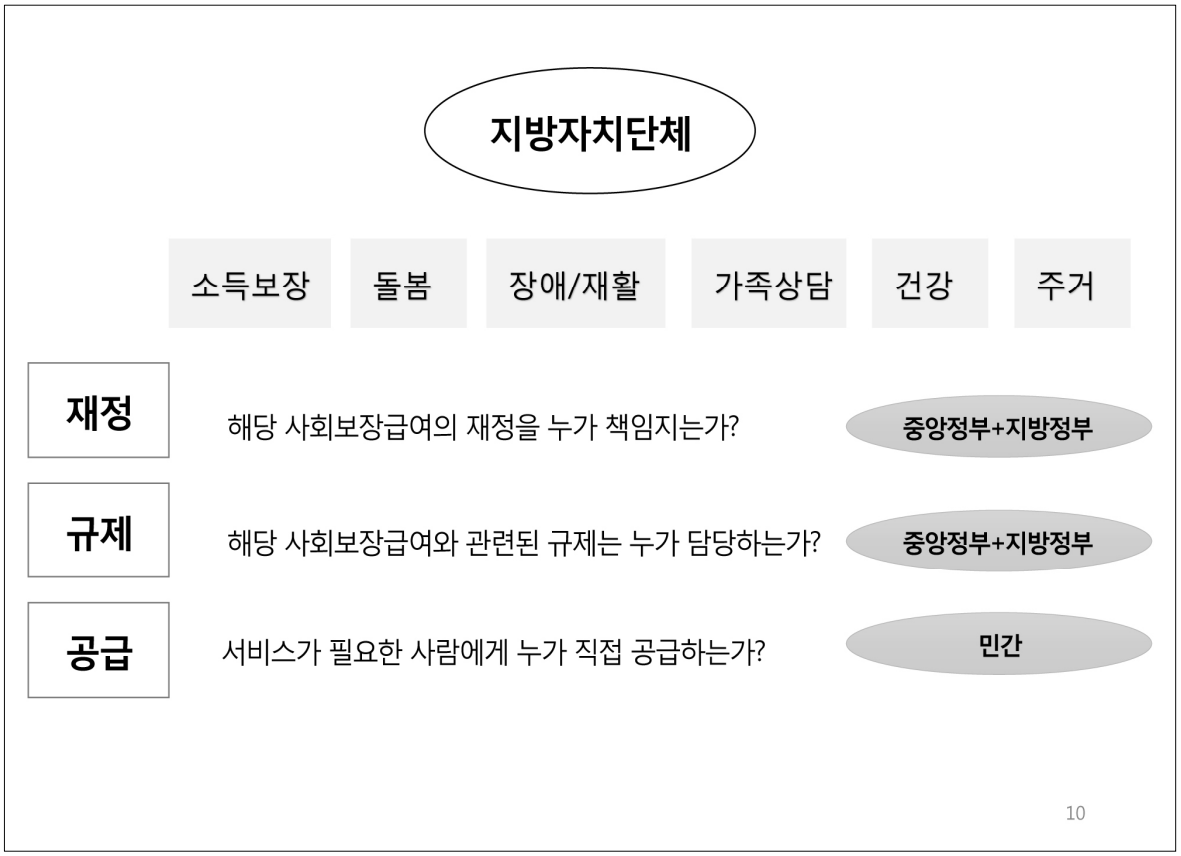
소득보장 | 돌봄 | 장애/재활 | 가족상담 | 건강 | 주거

권리성 서비스 이용이 사회권에 기반하여 보장되는가? VS 시혜/ 봉사 / 임의적

접근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가?

충분성 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될만큼 제공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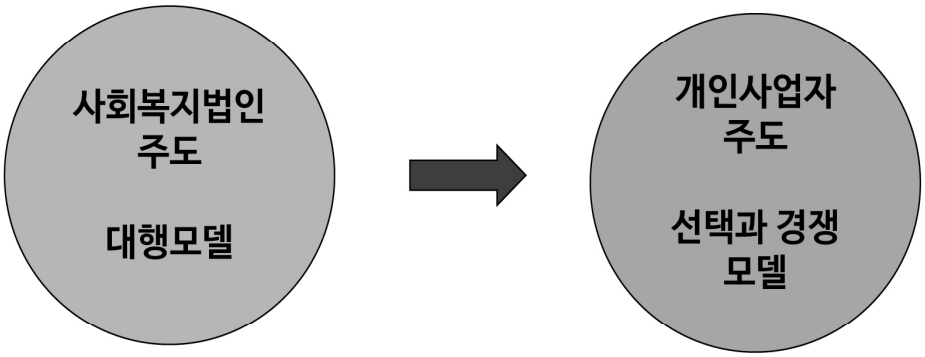
9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급여를 중앙정부에서 설계
  - 기관설립방식 ---→ 비용지원방식
- 사회적 욕구(needs)의 결과로 주어진 자원을 "개인의 선택 " 으로 소비, 그 결과도 개인이 책임 : 사회문제 해결의 집합적 책임은?
-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요와 공급관리 역할 미비
- 직접 공급을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 : 과소투자, 서비스 질 불충분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전환



- 사유화, 유착관계
- 사회서비스 보편적 확대를 위한 인프라 부족

- 과당, 출혈경쟁
- 불법, 부당청구
- 취약한 공급인프라 형성됨

현재 사회서비스보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업		수급자 차원	공급자 차원
국고보조사업	바우처	이용신청접수 수급자격결정	없음
	기관보조금	없음	재정지원
지방사업	이양된 지방사업	없음	재정지원
	고유사업	이용자 선정	재정지원

사회보장과 지방정부의 역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1 : 커뮤니티 케어

15

국정비전 – 국정목표–국정전략

출처: <100대 국정과제> 2017년 8월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 돌봄지원 확대
  - 치매국가책임제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립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 인하
-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지원 강화

17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대상

▪ 개념

-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1)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inuty)에 거주하면서 (2)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3)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 커뮤니티케어 정책대상

- (돌봄서비스 수급자)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46.7만명에 대한 추가 서비스 연계, 제공 등을 통해 편익 증진
  - 노인요양재가(33.7만명), 노인돌봄종합(4.8만명), 장애인활동지원(7.2만명), 저소득층 가사간병(0.9만명)
- (사회적 입원 등) 시설, 병원에서 생활 중인 73.8만명 중 입원,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
  - 요양병원 44.2만명, 정신의료기관 6.9만명, 생활시설 22.7만명
  - 요양병원 등에 입원 필요성이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은 8.3%

18

비전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핵심 추진과제

[1]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1.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
2. 안전 관리 등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1.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2.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1.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경로 설정
2.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여건 조성

[4]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1. 합리적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을 위한 기반 강화
2. 시설, 병원 등 평가체계 개선 추진

[5]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1.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
2. 커뮤니티케어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 강화
3.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연계 기능수행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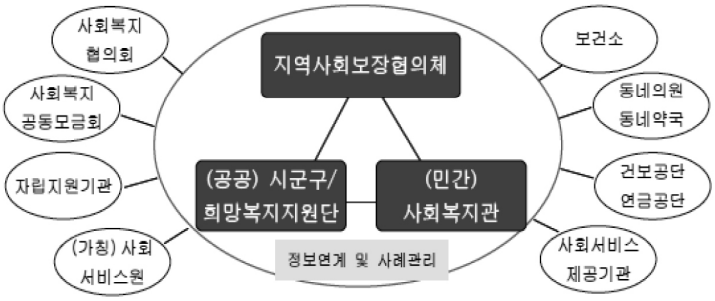
1. 민관협력체계 구축
2. 지역사회보장계획
3. 케어통합창구

19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서의 민관협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사회보장을 관장하고 책임지고 있는가?
- 각종 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은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지는가?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 협력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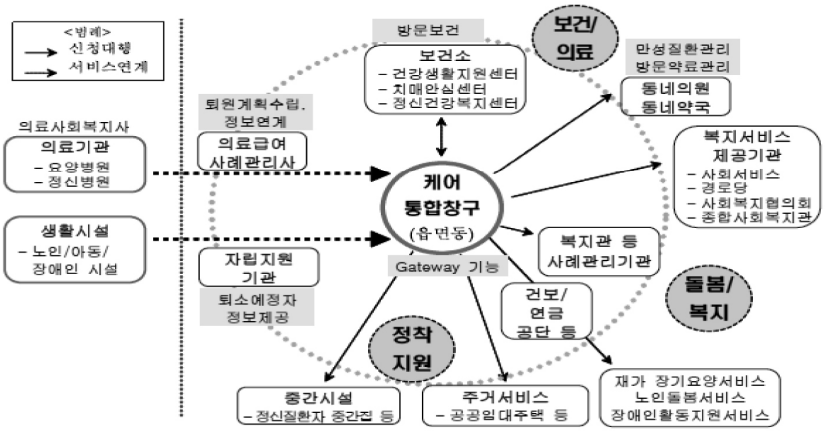


20

▪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 지역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반영
-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 연계 기능 수행
  - 읍면동사회복지공무원 12천명, 방문간호사 3.5천명 확충

<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안) >



21

4.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2 : 사회서비스원

22

국정과제 17번의 위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7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31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31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32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33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34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35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36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37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8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38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39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40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41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42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3
	28	소상공인 ·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43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44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45

- 경제
- 소득주도성장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공단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사회서비스공단 국정과제 추진경과

국정과제 확정 이후 복지부는 (가칭)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에 대해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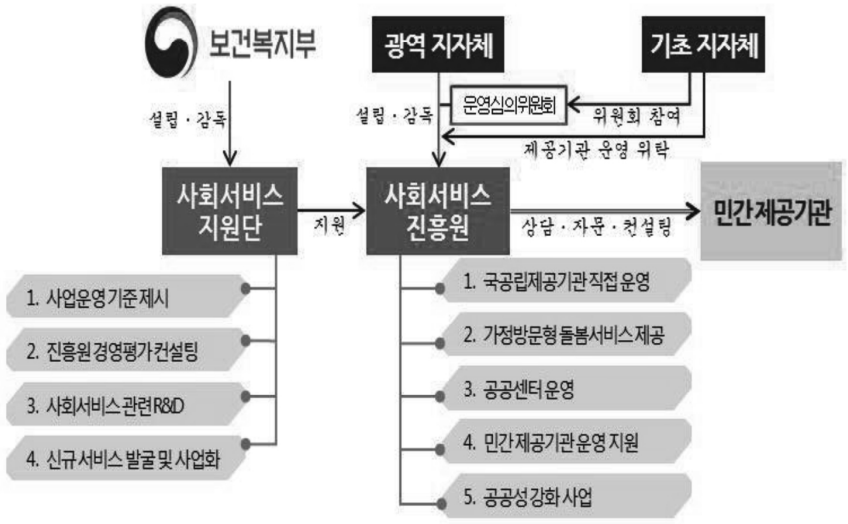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포럼 구성하여 50여명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2018. 4. 11. 보건복지부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 개요 발표
- 2018. 5. 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26

현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

- 개인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확대
-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보장급여의 확대
- 공급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성 강화
- 공적 공급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견인

27

5. 국내외 사례

28

영국 : 사회서비스 책임주체로서 지방정부

전통적 모델 :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협치
New Public Governance

직접공급자 Provider → 지원자 Enabler → 계획자 Commissioner

- 공공조직
- 공무원, 전문가
- 관료적 의사결정
- 직접 서비스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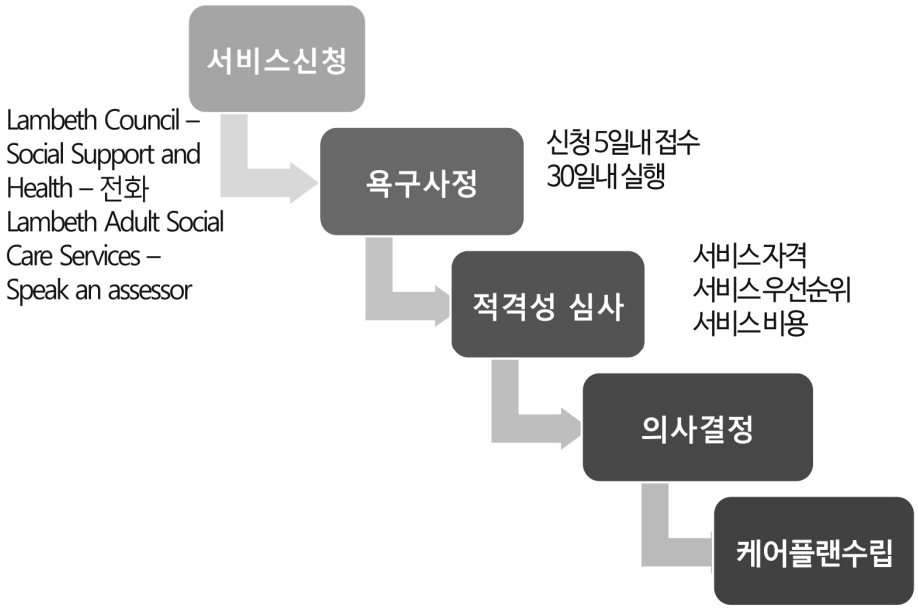
- 민영화
- 시장 이용
- 공공조직 내 경쟁
- 성과관리
- 비용절감

- 현대화
- 구매자/공급자 분리
- 파트너쉽
- 이용자 참여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

Regulation Monitoring

사회서비스의 신청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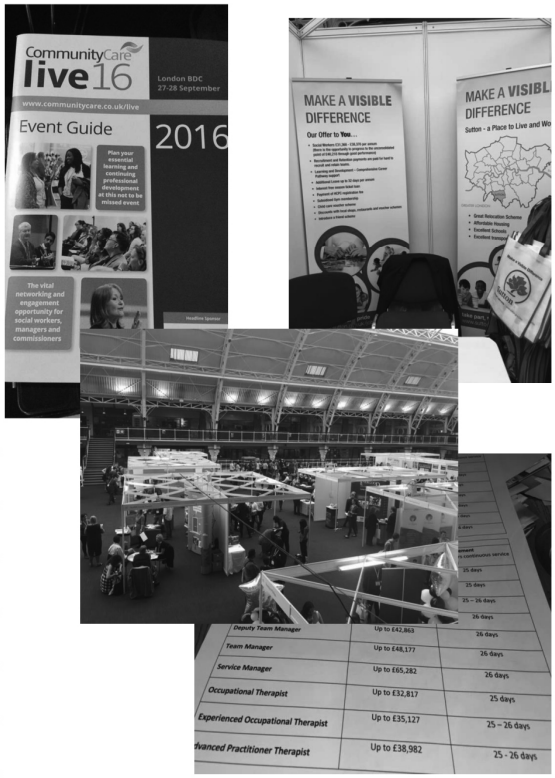
사회서비스급여의 창구로서 지방정부

-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 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관 목록
- 언제, 얼마나 자주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담당자의 이름(들)
- 서비스 이용이 재평가될 날짜 (이용자의 욕구가 충족되는지, 서비스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 등)
- 제공될 수 없는 돌봄과 지원 내용 그리고 왜 제공될 수 없는지 이유
-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는 행동

---- 지방정부 공무원은 위 내용이 적힌 계획을 신청자(이용자)와 토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인력 채용

직책	연봉
Social Care Assessor	Up to £ 28,357
Newly Qualified Social Worker	Up to £ 32,317
Social Worker	Up to £ 35,627
Advanced Practitioner	Up to £ 38,982
Deputy Team Manager	Up to £ 42,863
Service Manager	Up to £ 65,282
Occupational Therapist	Up to £ 32,817
Experienced Occupational Therapist	Up to £ 35,127
Advanced Practitioner Therapist	Up to £ 38,982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 : aging in place

- 코펜하겐 노인복지의 범주
  - 건강과예방 : 치과치료, 간호, 건강증진, 질병예방
  - 재가중심서비스: 재활, 훈련, 질병예방 / 재가서비스(대인서비스, 가사서비스, 활동, 식사)
  - 평생돌봄: 너싱홈 / 대인서비스/가사/일상생활 / 식사
- 코펜하겐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62천명 중 12천명이 재가서비스 수급자 (19.3%)
  - 42% 가사서비스
  - 8% 대인서비스
  - 50% 혼합
- "Nursing Home"으로 : 44개 홈, 3,350 거주자 (5.4%)
  - 너싱홈 거주인 평균연령 85세, 평균 거주기간 4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 국내사례

- 광주 광산구 직영모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사회복지사로 공공채용
  - 노인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
- 경남 창녕군 민관협력모델
  - 희망복지단 통합사례관리사 중심으로 보건소, 자활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와의 협력사례관리
  - 창녕군 주민복지지원실 안에 각 사업 관리사, 독거노인사업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직접고용 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조직적 연계 - 아카데미 등 공동교육
- 서울시 “서울형 " 모델
  - 중앙정부의 기준을 상회하는 “서울형 " 사회보장급여 수준으로 사업운영하여 질적 향상 도모

감사합니다.

35

주제발표 2

지방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남 찬 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2018. 08. 29

남찬섭 (동아대학교)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경과
3. 제도의 도입 및 정비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
5. 평가와 함의
6. 복지기능강화 방안
7. 나가는 말

2

1. 들어가는 말-1

- 탈산업화 및 지구화, 저출산·고령화 흐름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근로빈곤 증가, 인구문제 심각화, 가족기능약화, 돌봄공백 증가 등 신사회위험이 증가
- 완전고용과 남성가장모델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한 흐름으로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들 수 있음
- 신사회위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흐름으로 분권화 흐름을 들 수 있음. 분권은 중앙정부의 복지책임 약화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신사회위험에 대처하는 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하고 여기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권은 필수적인 면이 있음
- 우리나라도 사회서비스는 '90년대 이후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런 사회서비스 발전은 '95년 지방자치 부활과 '05년 복지서비스 지방이양 및 현 정부의 지방자치 강조 등 분권화와 흐름을 같이 함.

3

1. 들어가는 말-2

-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진전에 따라 복지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은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다양한 시도로 이어졌음
-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시도가 전달체계를 적절하게 개선해 왔는가는 회의적임.

> 고령화와 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 … 또한 지방분권화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 … (하고자 함).

4

1. 들어가는 말-3

- 전달체계는 지역단위에서 서비스 공급자들과 수요자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 및 공급자들 간의 관계(공급구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의미하고 바람직한 전달체계는 이러한 관계가 바람직하게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경우 분절성과 비효과성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중점을 두어 그간의 정책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5

2.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경과

-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는 민간공급자 중심의 공급구조를 축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을 근간으로 한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제도로 발전해 옴(사회복지서비스)
- 이 시기에는 전달체계가 민간중심으로 구축. 공공부문은 형식적 감독에 치중. 중앙-지방 관계는 위계적인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하였음.
- 이러한 전달체계 구조는 참여정부 때인 '05년 복지서비스 지방이양과 '07년 바우처 도입으로 큰 변화에 직면함.
- 이후 '07~'08년 이후부터의 공공사례관리 등장,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장화와 중앙화, 분권화, 공공화 등 다양한 흐름과 정책기조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 흐름들은 크게 제도의 도입 및 정비와 공공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두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6

3. 제도의 도입 및 정비-1

- 사회서비스 제도화 내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 법령 개정은 이미 2003년 7월에 이루어진 바 있음. 이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신청-조사-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고(법 33조의2부터 33조의7) 이와 함께 이용권(바우처)이 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규정됨(법 33조의7). 또한 재가복지서비스 조항이 신설되어(법 44조의2) 주단기보호와 가정봉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 하지만 '신청-조사-지원' 조항과 바우처 조항은 주목받지 못하고 사문화함.
- 이후 '05년 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 단행되면서 복지부는 사문화한 위 두 제도 중 '신청-조사-지원'이 아니라 바우처 조항을 되살려내는 시도를 하였고, 이 시도는 성공을 거둠. 이로부터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 사회적기업육성법('07):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2): 바우처 제도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7

3. 제도의 도입 및 정비-2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12.01 공포; '13.01 시행)
  - 7대 영역(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에 걸친 사회투자적 서비스(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관련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라는 최광역의 사회서비스 개념
  - 평생사회안전망 원칙 천명(법 3조 5호, 22조 1항). 이는 사회보장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됨. 평생사회안전망은 곧 맞춤형 사회보장인데 따라서 이는 맞춤형 사회서비스(tailored social service)로까지 이어져야 하지만 관련 노력은 부족
  - 급여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각종 관리운영체계를 규정하고 공공복지대상자에 대한 전자적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 권리에 관해서는 조항 개정이 없었음
- '권리'보다는 '관리'에 과도하게 치중한 법 개정

8

3. 제도의 도입 및 정비-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14.12 공포, '15.07 시행)
  - 서비스 신청-조사-지원 절차 구체화(법 5~18조). '0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조항. 서비스제공절차 마련 – 서비스제공 권한·책임 명시
  - 급여관리체계 구체화(법 19~21조)
  - 지원대상자 발굴 조항 신설(법 10~13조). 관계기관 등의 정보공유, 종사자의 신고의무
  - 서비스제공절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 사회보장기본법의 관리운영 조항 구체화 → 사각지대 해소, 복지행정 투명성 제고 → 평생사회안전망

9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1

-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는 크게 복지부의 지방조직 구축 시도와 지방정부의 복지기능강화 시도, 중앙화 시도의 세 가지 흐름이 혼재하였음.

1) 복지부의 지방조직 구축 시도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95.07~'99.12)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04.05~'06.06)으로 추진
- 하지만 복지부의 지방조직 구축 시도는 모두 실패
- 이는 시·군·구-읍·면·동 중심의 내무행정체계가 뿌리깊어 이의 변경이 쉽지 않음과 기존 내무행정체계를 활용한 복지기능 강화가 현실적 대안임을 보여줌
- 이로부터 지방정부의 복지기능강화 시도가 본격 추진

10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2

2) 지방정부의 복지기능강화 시도

-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06.07~'07)
  - 8대 서비스(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체육·관광)
  - 시·군·구-자산조사; 읍·면·동-사례관리
  -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
  - 인력부족으로 효과 미미
- 시·군·구 중심 사례관리('08~'09. 민생안정전문요원)
  - 위기/집중관리가구 사례관리를 시·군·구로 이관
-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사업 ('10~'11)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토대로 진행되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본격화함 (민생안정전문요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사례관리의 체계화 시도했으나 여전히 인력 미비로 한계

11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3

- 희망복지지원단('12.04~)
  -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하여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 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주민센터 복지업무 지도·감독 등 역할 수행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사)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13~):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14.7~'15),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등 추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16.7~)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수요자 맞춤형 전달체계)
  - 읍·면·동까지 통합사례관리 기능 확대 목표
- 지방정부 복지기능강화와 함께 중앙화 시도도 함께 추진

12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4

3) 중앙화 시도

- 바우처 제도의 본격적 도입('07년 이후)
  - '05년 지방이양 이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권한 유지
  -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회보험공단의 사회서비스 참여: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 시도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초래하였음 → ①국고보조 방식의 전통적인 공급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②지방이양된 공급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③바우처 방식의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④사회보험공단이 관여하는 사회서비스

☞ 이런 분절적 전달체계 위에서 현 정부 들어 새로운 시도들이 각각의 의도와 목적을 가진 채 추진되고 있음

13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5

현 정부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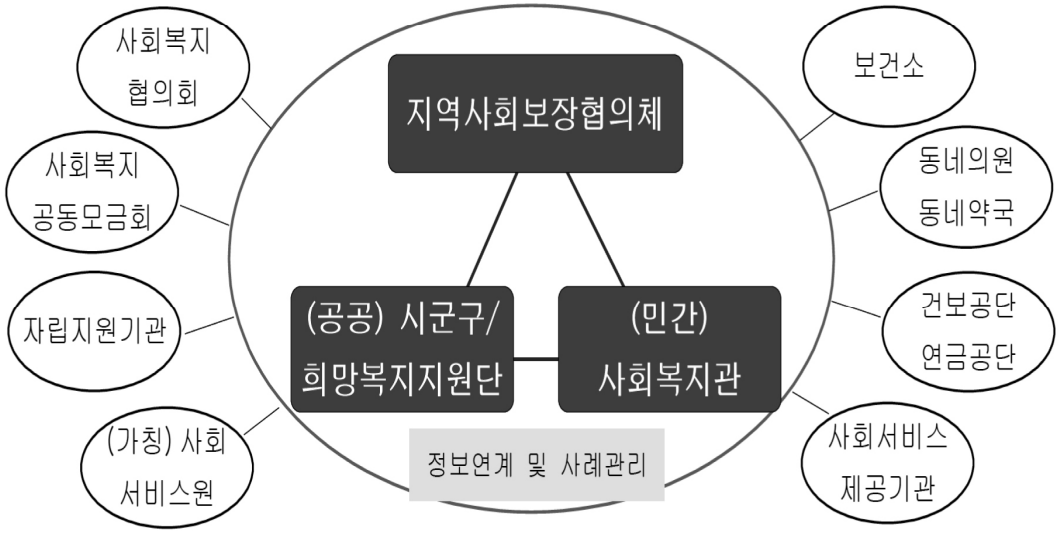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공단('17.5~): 보건복지부문의 일자리 증가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민간 중심 공급구조의 공공성 강화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국화('17.9~)
- 커뮤니티케어('18.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 대응
  - 개념: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 핵심과제: ①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②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③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④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⑤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14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6

커뮤니티케어의 민관협력 체계도(안)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 협력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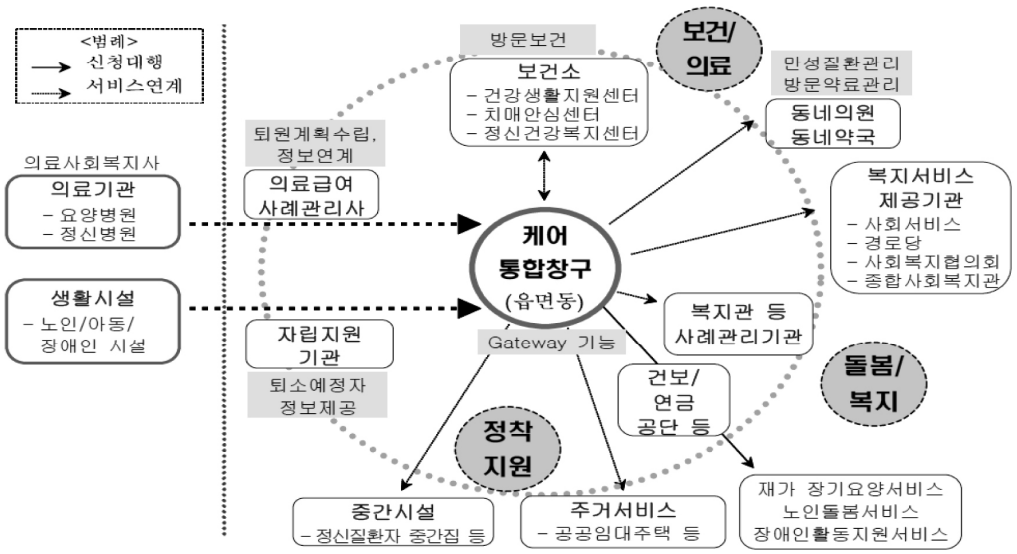


15

4. 공공전달체계 구축 시도-7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 흐름(안)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안)>



16

5. 평가와 함의-1

1) 국가적인 틀에 의한 전달체계 구축의 의의

- 현금지원이 아닌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권한과 책임 구체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
- 사회보장급여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절차(신청-조사-지원 절차)는 과거 민간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왔음→ 공공부문이 민간기관과 적절히 협력할 필요

2)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가 중요

- 복지부 산하의 지방조직 구축 시도는 현실성 약함
  – 시·군·구-읍·면·동 중심의 행정체계에 익숙
- 그간의 법령 정비도 지방정부의 복기기능 강화를 지향
  – 파편화 된 전달체계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묶일 가능성
  – 물론 여전히 사회보험공단 중심의 중앙화 압력은 존재

17

5. 평가와 함의-2

3) 공공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

- '06년 이후 공공전달체계 구축시도에서 사례관리기능이 시·군·구와 읍·면·동 사이를 이동하다 지금은 읍·면·동으로 이관 → 이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줌
- 접근성 제고에 맞는 인력 확충 및 인사관리체계 개편 필요

4) 공급구조에서 공공부문 증가 → 효과적 운영모델 개발 필요

- 사례관리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서비스공단 안이 추진되는 등 전체적으로 공급구조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혹자는 공급자에서 공공부문 공급자가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성 강화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타당하나 지금의 민간 일색의 공급구조도 공공성과는 맞지 않음. 공공과 민간의 조화
- 하지만 직영모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모델 개발 필요

18

5. 평가와 함의-3

5) 온라인 전달체계의 기능 명확화 필요

- 현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자적 접근은 오프라인 전달체계를 대체할 정도임. 특히 사례관리나 사각지대 해소에까지 온라인 전달체계가 활용되고 있음
- 온라인 전달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와 바람직한 공동체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6) 신청-조사-지원 절차의 실행 필요

- 공공전달체계에서 신청-조사-지원 절차의 이행은 매우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점차 없애고 욕구기준으로 전환할 필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준 마련이 추진되어야 함
- 커뮤니티케어에서처럼 읍· 면· 동이 접수창구의 기능을 하더라도 시· 군· 구 단위에 욕구기준에 따른 판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설치될 필요

19

5. 평가와 함의-4

7)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적 접근 필요

- 찾아가는 복지는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지향
- 일각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를 발굴주의라 말하고 이를 신청주의와 대비시키지만 이 대비가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며 또 발굴주의의 개념이 분명한 것도 아님.
  - 신청주의는 관료적 요소도 있지만 권리적 요소도 있음
  - 사각지대가 찾아가는 복지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후 그 가족이 와서 신청하면 이는 발굴주의인가 신청주의인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밀착적·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대응과 개선이 필요함
- 방문형 대응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대응도 중요함

20

6. 복지기능강화 방안-1

1) '신청-조사-지원' 절차의 충실한 이행

- 사회보장급여법을 중심으로 이미 법령에 규정된 '신청-조사-지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법령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면 이것이 곧 사례관리 기능의 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사례관리기능과 역할분담을 모색할 필요

2) 소득기준이 아닌 욕구기준 마련

- 사회서비스에서는 소득기준보다 해당 주민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의 욕구기준이 중요 (소득기준은 서비스 받은 후 본인부담액 산정시 적용할 수 있음)
- 욕구기준의 마련 문제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21

6. 복지기능강화 방안-2

3) 공공부문 직영모델 개발 필요

- 공급구조에서 공공부문의 직접 제공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부문 직영모델의 성과는 알려지지 않거나 낮음 → 공공부문 직영기관의 효과성이 낮아서는 공급구조의 공공성 주장에 한계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추진될 경우 이것의 운영모델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 외 여러 영역의 직영기관들의 효과적인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4) 복지와 '마을만들기' 분리 필요

- 일부 지방정부는 복지와 마을만들기를 동시에 추진
-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지향성이 달라 둘을 혼합할 경우 복지전달체계와 마을만들기가 각기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

22

6. 복지기능강화 방안-3

5)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

- 복지 업무의 양적 증가 및 업무내용의 복잡·다기화로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크게 증가
- 복지업무 수행에는 일반행정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 필요.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와 지역조직 등의 기술이 필요함
- 인력의 양적확충과 질적향상 간 상충 증가로 이의 해결이 중요

6) 전담공무원 교육 및 학습체제 구축

- 전담공무원의 별도 교육체제 구축, 복지기획력 공유·축적 필요
- 경력직 공무원의 전문분야 활용, 전담공무원 학습체제 구축. 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퍼비전을 제도화

23

6. 복지기능강화 방안-4

7) 전담공무원 보직제도 개선

- 복지부서에 대해 상위직급 사회직 단수 보직을 확대할 필요
- 또 예산·조직·감사·의회·보건·교육 등 관련 업무에 복지직 배치를 확대하여 기획·예산에서부터 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복지업무의 특수성이 반영하여 복지행정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 복지현장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의 동장과 사무장에 복지직 배치 확대 필요 → 지역자원의 조직화 가능

8)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화

- '찾아가는 복지' 제도화의 일환으로 전입·출생·사망 신고를 복지공무원이 담당토록 업무 조정
- 관내 사회서비스 소개 및 사각지대 발견 시 복지전담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홍보

24

6. 복지기능강화 방안-5

9) 사회서비스원을 바우처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모델로 추진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민간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한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에 부적합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이므로 이를 추진하되 바우처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모델로 추진
-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전반에 대한 조정기능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추진 여부 판단

10) 민관협력체계 구축

- 민관협력체계의 모델은 여러가지이며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 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읍·면·동을 진입창구로 하고 시·군·구를 사례관리단위로 하며 그 외 다양한 민간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진할 필요

25

7. 나가는 말

- 지방정부 복지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중요함.
  -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현금수당은 전액국고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 필요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국고보조율도 개선해야 하며 지나치게 매칭방식을 고집하는 국고지원도 사안에 따라 달리하는 유연성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 복지분권은 중요하지만 이것과 주민자치는 또 다른 문제여서 양자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과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26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3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고 관 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2018. 8. 29.

제주한라대학교
교 수 고 관 웅
kky@chu.ac.kr



CONTENTS

CHAPTER 1 주요현황

CHAPTER 2 민선7기 제주 사회복지 비전

CHAPTER 3 향후 추진방향

00 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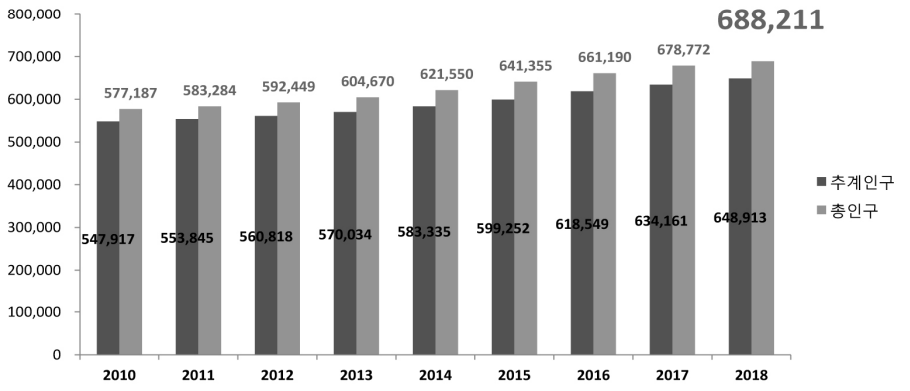
01 주 요 현 황

02

CHAPTER 1 주요현황

인구편. 추계인구와 총인구

(단위: 명, 2018. 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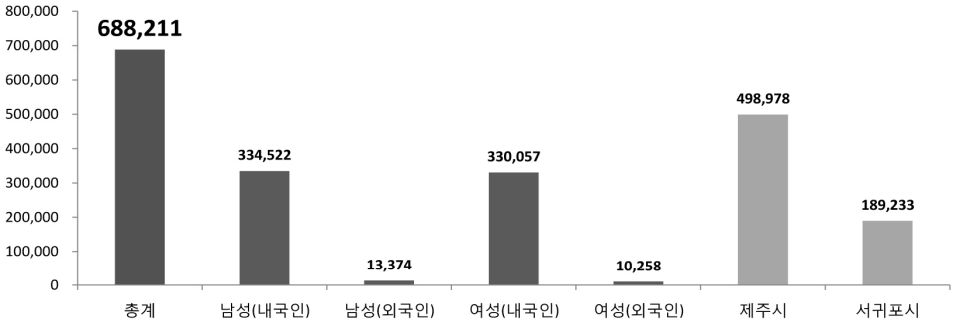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50대 통계"

5

CHAPTER 1 주요현황

인구편. 지역별 인구와 성비

(단위: 명, 2018. 7.31. 기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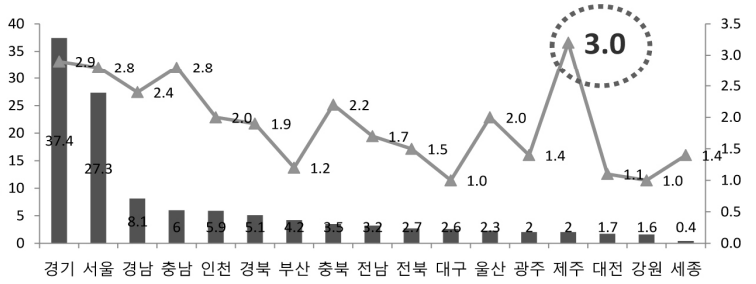
CHAPTER 1 주요현황

인구편. 외국인등록인구

(단위: 만명, %, 2016. 12. 기준)

광역시 단위 외국인등록인구 및 인구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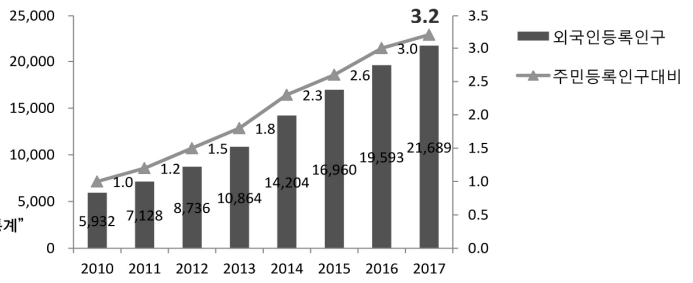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



(단위: 명, %, 2017. 12.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외국인등록인구 및 인구대비 비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50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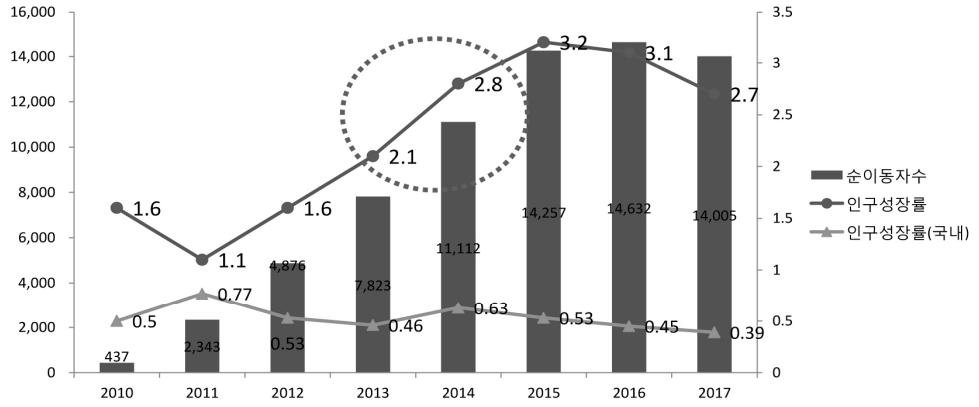


7

CHAPTER 1 주요현황

인구편. 순이동자수와 인구성장률

(단위: 명, %, 2017. 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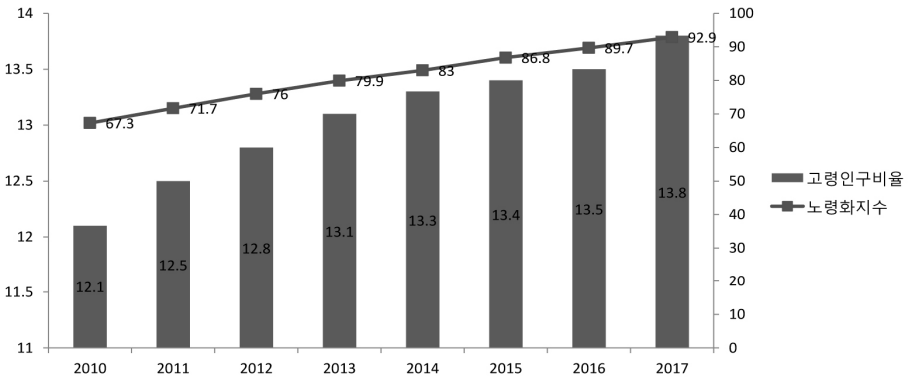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50대 통계", 통계청(KOSIS). "장래인구 추계"

8

CHAPTER 1 주요현황

인구편. 고령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단위: 명, %, 2017. 12. 기준)



주1) 고령인구 비율은 65세 이상 기준
주2)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인구 1백명당" 노령인구 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50대 통계"

9

CHAPTER 1 주요현황

보건 · 사회복지편. 사회복지 예산

(단위: 억원, %, 2018. 1. 1.기준)

구분	(a)+(b)	사회복지(a)								보건 (b)
		소계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10,727	10,062	1,526	1,494	3,101	3,009	302	111	519	665
비율	21.3	20.0	3.0	3.0	6.2	6.0	0.6	0.2	1.0	1.3

주) 도 전체예산: 5조 297억원 (일반 + 특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10

CHAPTER 1 주요현황

보건 · 사회복지편.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 2018. 1. 1. 기준)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 ·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결혼 이민자
인원	21,937	36,646	125,423	93,117	35,104	7,762	3,822
인구대비	3.34	5.57	19.09	14.17	5.34	1.18	0.58

주) 도내 인구 657,083명 대비 (2017.12월말 기준, 외국인 제외)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11

보건 · 사회복지편. 주요 인프라(I)

(단위: 개소, 2018. 1. 1. 기준)

구분	계	노인 (67)			장애인 (33)				정신건강 (2)		노숙인 (2)	아동 (12)			여성 (11)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피해전용노인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쉼터	정신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127	2	64	1	13	4	15	1	1	1	2	5	5	2	6	5	

구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27)				장애인 (39)						정신건강 (3)		아동(72)		지역자활센터	여성상담소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타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재활	직업재활	아동복지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이용시설	165	10	21	2	2	2	5	18	4	1	1	10	2	1	6	66	3	9	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보건 · 사회복지편. 주요 인프라(II)

(단위: 개소, 명, 2018. 1. 1. 기준)

의료기관								
구분	계	병원급			의원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827	6	7	10	415	207	181	1
병상수	4,699	2,210	631	1,596	258	–	–	4

의료관련 인력							
인력수	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8,011	1,664	212	261	3,808	467	1,599

의약품 판매업소						
업소수	계	도매상	약국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956	11	270	4	2	66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CHAPTER 2
제주지역
사회복지 비전

비전 (Vision) — "모두가 함께하는 체감복지 구현"

핵심전략 (Core Strategy)

1. 다같이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2. 어르신 ·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제주
3.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조성
4.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활기찬 사회

목표 및 실행계획 (Goal & AP)

1
-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
- 현장밀착행정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

2
- 정년 없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고령친화도시
- 편안한 요양서비스 및 노인보호사업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 강화

3
- 양성평등 ·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강화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가속화
- 돌봄과 일 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문화 확산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보호 · 지원 강화

4
- 공공보건의료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
-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산업 육성
- 제주맞춤형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 도민과 함께하는 위생문화 수준 향상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의 내용을 재구성.

15

민선6기 주요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주 요 성 과

1 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는 제주형 복지정책 실현

현장중심복지전달체계 강화 / 청소년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 맞춤형보육 및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2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행정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 공감대를 넓히는 장애인 복지정책 / 화장문화확산에 따른 도민의식 제고

3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구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확대 및 재지정 / 농어촌형 새일센터 등 지원기반 확대

4 사회적 돌봄 및 가족친화 확산 토대 마련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일,가정 양립 기반 확보 /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16

민선6기 주요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개 선 사 항

1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및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미흡

현장중심의 전달체계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보육과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공간확보 필요

2 읍면지역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장거리에 위치한 시설에 요양보호사 지원 필요 /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훈련 평생교육 지원 확대

3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 필요

도, 행정시, 읍면동 부서별 양성평성담당관 지정 운영 필요

4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의 확충 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성복지시설 임대거부 등 임차의 어려움 / 안정적인 여성복지시설 공간확충 필요

17



CHAPTER 3
향후
추진방향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FLOW: 도입과 혁신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아동수당 제도의 시행
- 최저임금법 개정
-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의 추진 (문재인 케어)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공공일자리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복지전달역량 강화

-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
- 커뮤니티케어 도입
- 읍면동 주민센터 전달체계 강화

포용적 복지의 구현

지방분권

돌봄의 탈시설화

19

CHAPTER 3 향후 추진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추진 방향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 공공부문 고용 창출과의 연계

- 커뮤니티케어 도입 및 기반 마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제7기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수립
- 보건 · 복지 관련 인력 확대, 처우 개선 등

민관 협력 확대: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성 강화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확대 및 컨설팅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
-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구체화
- 공공돌봄체계 확대 및 역할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 · 복지 체계 강화

도민 복지체감도 제고

보건 · 복지영역 공공성 확보

20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방향

추진 목표

1 촘촘한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 지역복지 나눔문화 확산 / 안전환경 조성 및 내실화

2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제주 구현

아동돌봄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도민여가문화 수준 제고

3 지속가능한 보건복지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복지환경 개선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커뮤니티케어 안정적 정착

4 자율적 유니버설 디자인 실천 확산

고령친화체험관 추진 / 교통약자이동 편의시설 확대 / 안전하고 조용한 무장애도시 교통체계 구축

21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주 요 성 과

1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

지역사회복지관 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노숙인시설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2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추진 /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 어르신 주택 수리비 지원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장애인 권익옹호체계 확립

장앵인복지과 신설 및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복지인복지관 건립 / 장애인단체 지원확대

4 장애인활동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2



23